

수소차 충전소 확대된다... 상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사립학교 시행령·성비위 징계 등 대통령령안·일반안건 15건 의결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2018년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찰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와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혁신적 포용국가는 실패한 사회주의 부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베네수엘라 비유 현 정책 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베네수엘라의 현실'로 비유했다.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가.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때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꼭 가야 할 길"로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의미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 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와 함께 거론된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이렇다. 석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95%를 차지하는 남아메리카 국가 베네수엘라는 이렇다 할 다른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석유 수출에만 의존한 탓에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국가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직면했고, 300만명이 떠났다.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할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뒤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기업인들 반응을 예로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라면서 "무려 54조원을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스투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착취 정권'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한국당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한식 발전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침체에 빠진 한식정책이 진흥법 제정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3일 국회도서관 사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 최희

중 한국외신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과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 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의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식품부, 봄철 가축질병 '사전차단'

전통시장·비료업체 등 일제점검

설 연휴기간 가축농가를 긴장하게 했던 구제역이 진정된 가운데 정부가 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나선다.

올 겨울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끝까지 차단해 가축시장 안정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봄철 AI 발생 예방을 위해 3월말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센터 등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수하물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이번 점검은 봄철 전통시장에서 중병아리 판매가 증가하고 영농기를 앞두고 기금의 분뇨와 유기질 비료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AI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회 간 자율차, 정쟁에 시동도 못걸었다

시연 연기에 행사장 분위기 냉랭

"행사를 오후 1시로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 70년 역사상 최초의 '자율주행차 국회의사당 경내 운행' 행사는 여야 정쟁으로 그렇게 뒷전이 됐다. 30분 넘게 준비속 추위에 떨던 참석자들은 "아..."라는 탄식과 함께 흠뻑 젖었다.

1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관의 '자율주행 플랫폼' 시연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번 행사는 쏘카와 SK텔레콤, SWM, AI, 인벤트솔루션, 서울대, 연세대 등 대·중소기업과 학계의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골목한 기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가 함께 자율주

행차를 타고 국회 경내를 돌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사 한 시간을 앞둔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고,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연설 후 긴급의 원총회를 소집했고, 여야 원내대표의 행사 참석은 커녕 시연까지 결국 오후 1시로 밀렸다.

정시에 맞춰 홍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에 왔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초당적 행사였지만, 이례한 원내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대 여섯명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행사 20분 후어나 모습을 비쳤다.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율주행 플랫폼' 시연 행사가 오후로 밀리자 참석자들이 해산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이번 시연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핵심인 공유차 사업에 혁신을 불러온 기술이었지만, 정쟁에 떠밀려 홍보도 제대로 못한 채 끝났다.

행사 후 쏘카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아쉽다"고 짧게 대답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현대차와 SK텔레콤도 행사 실시에 대한 외부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산업부, 국가표준 오픈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범부처 참여형 운영체계 발전 및 융합산업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국가표준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10대 표준화 분야의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을 개발하는 '300-30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

가표준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 등 9개 부처 표준담당관이 참여해 부처별 2019년도 표준화사업계획 및 정책방향, 표준(KS) 위탁 재조정 결과를 공유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세계 각국은 융복합 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표준전쟁 중"이라며 "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산업분야의 특성 상 그 어느 때보다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